

작물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 강연회

유럽중심 확대 추세 농약의 '평화산업' 기능 중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비료·농약 유효적절 사용
노동력 절감·수량 감수 방지 등 중요성 인식시켜 스스로 찾도록 해야

- 홍보부 -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4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최근 만능인양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등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북한농업 현황 및 작물보호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부강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최두희 과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작물보호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연사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최근 북한의 농정변화와 작물보호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10~20% 목표, 확대 추세

친환경농업이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농업소득의 만족, 안전농산물 생산, 생태계보존, 쾌적한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이 가져다주는 공기와 물, 토양은 물론 비료와 농약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OECD에서는 농업생산력 확보 및 환경보전 목적 달성을 위한 농업기술이라 정의하였고, FAO는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유지 및 천연자원의 손실과 파괴 방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라 했다. 미국은 저투입 지속 가능한 농업(LISA)으로, 일본은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의 친환경농업 개념을 정리하면,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농업 소득의 수익성 및 식품의 안전성 등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농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질 및 농경지 오염과 지속 가능한 생산 위협, 생태계 파괴, 인간의 건강한 삶 위협, 소비자의 요구와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

현황을 보면, 94년 농림부 환경농업과 신설, 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시행, 제1차(00~05)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추진, 친환경농업 예산을 확대(00-554, '05-2,218억원) 하였다. 또 생산현황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농산물의 5%인 798천톤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곡류 12%, 채소류 41%, 과일류 36% 등이며 종류별로는 저농약 61%, 무농약 30%, 유기(전환기) 9%로 나타났다.

유통현황을 보면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비중이 높은 편이며 대형할인점 등을 통

한 유통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유통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또는 생산자조직(농협 등) 매장을 통한 판매, 생산·소비자 연계조직(생협 등)을 통한 판매, 백화점, 할인점, 전문유통업체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규모는 2005년말 기준으로 7,8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구분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호주	아르헨
재배면적(천ha)	950	5	509	1,168	10,000	2,960
전체대비(%)	0.2	0.1	1.7	8.0	2.2	1.7

(자료 : IFOAM, 2004.2)

해외 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전체농산물 대비 10~20%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크게 확대 추세에 있다.

2005년 농경연이 실시한 친환경농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구입동기로 가족의 건강(44%), 안전성(28%), 영양가(8%), 환경보호(4%)를 들었으며 적정 프리미엄으로는 유기는 74~85%, 무농약 49~57%, 저농약 28~34%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의 종류로는 농업환경과 작물생산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적절한 농자재 투입으로 농업생산에 의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 유지하는 농업(LISA), 즉 균형투입지속농업, 정밀농업, 최적영농관리, 지속적농업 등이 있다.

친환경농업육성 목표는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등이다.

중요성 인식시켜 '의제' 채택토록

비료, 농약, 농기계, 활판(모판설치용), 대죽 등 각종 농자재 산업은 국내농업의 쇠퇴로 사양 산업화하고 있다. 특히 비료와 농약은 세계적으로 유기 농산물이 선호됨에 따라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다. 농약산업이 나아갈 길은 노동력 절감 효과 및 수량 감수 방지 등 북한에 농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스스로 원하고 찾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에서의 동시 마케팅 전략을 펴 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물론 식량난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자재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당국간 협상 의제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일농정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규모의 확대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농정의 추진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남북한 양측의 농업을 비교하고 협력하는 논의는 1990년대까지는 남북한의 정치적 여건으로 의의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나마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 것을 다짐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농업외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분야도 교류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 자급문제는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통일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농업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북한은 남북 농업협력에 대해 남한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농업협력은 북한이 남측과 교

환적 성격의 교류와 협력은 원하지 않는다. 비료, 농기계 및 농약 등 농자재만 남측에서 지원 받고 인적 및 현장교류는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에 남한은 호혜적 성격의 농업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면서 남북간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통일농정을 요망한다. 평양은 자신들의 농업기술과 농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평양의 관심은 남측에 지원받는 비료와 쌀 등의 지원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과 농법에 대한 남측의 지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 농업분야의 협력이 여타 분야보다 남측에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으나 개방과 체제 노출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농업협력은 일년에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 열악한 농촌시설 등이 남측에게 공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또 북측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협력방안 역시 북측에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측 입장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방적인 지원도 곤란하다.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단기에 는 인도적 지원의 형식을 취하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협력방안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으나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소규모의 영농자재 지원은 농업 협력초기에 어느 정도 불가피 할 것 같다. 소형 양수기를 공급하고 최근 평양 인근까지 발생한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참여하는 방안, 지난 199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 1995년 이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벼물바구미 방제농약을 공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